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의*

- '4·19의 길'과 '5·16의 길' 사이에서 -

차성환**

| 목 차 |

- I. 머리말
- II. '4·19의 길'과 '5·16의 길'
- III. 유신체제 - '5·16의 길'의 이상형
- IV. 유신체제 하의 '4·19의 길'
- V. 맺음말

| 국문초록 |

이 글은 부마항쟁이 한국현대사라는 거시 역사적 흐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고찰하려 한다. 그 기준으로서 한국현대사의 흐름을 '4·19의 길'과 '5·16의 길'의 대결로 파악하는 관점을 가설로 설정한다. '4·19의 길'이란 민중이 중심이 되어 민주주의, 민족자주, 평등, 인권, 남북 평화, 통일 등을 지향하는 노선이며, '5·16의 길'이란 지도자가 중심이 되어 권위주의, 친미, 반공, 반북, 효율성, 성장주의 등을 지향하는 노선이다. 이 두 개의 길은 적어도 196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서로 대결, 경쟁, 길항하면서 진화, 발전해 왔다고 본다. 그렇게 볼 때, 부마항

* 본 논문은 2019년 10월 31일 부산광역시 주최 '부산지역 민주화운동' 학술대회 때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임.

**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 / csh0429csh@naver.com

쟁은 이 두 가지 길 중 ‘5·16의 길’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이었다. 유신체제에서 그 상황을 극적으로 반전시킴으로서 질식 상태에 있던 ‘4·19의 길’을 극적으로 되살려낸 사건이다. 유신체제 하에서 박정희는 국가의 모든 권력을 집중시켜 ‘5·16의 길’이 지향하는 목표로 매진했고 전 국민을 유신이데올로기(한국적 민주주의)의 세례를 받도록 교육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 교육은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다.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박정희에 대한 숭배와 찬양은 대체로 이 시기에 배양된 것이다. 이 시기에는 민주주의와 인권 등 ‘4·19의 길’이 추구한 가치는 폄하되었고 4·19의 기억 자체도 무관심과 망각 속에 묻으려 했다. 하지만 1960~70년대 전 시기에 걸쳐 끊임없이 지속된 민주화운동, 민중운동의 크고 작은 흐름들은 마침내 부마항쟁이라는 거대한 화산으로 폭발하면서 10·26사건이라는 여진을 만들고 박정희의 사망을 통해 유신체제를 붕괴시켰다. ‘4·19의 길’이 다시금 ‘5·16의 길’을 밀어내고 역사의 주류로 등장하는 것은 부마항쟁과 10·26 이후 등장한 최규하 과도정부 하에서 모든 언론과 정치세력이 민주화를 내걸었던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신군부가 권력을 탈취하기 위해 새로운 쿠데타를 일으키지만 적어도 그 이전까지는 어떤 세력도 민주화를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대세로 수용하게 되었던 것은 부마항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마항쟁은 4·19의 길을 기사회생시켰고 신군부가 이를 뒤집었지만 5·18항쟁과 6월항쟁을 통해 다시 뒤집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었다는 거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주제어 : 부마항쟁, 유신체제, 4·19의 길, 5·16의 길, 이데올로기 교육

I . 머리말

이 글의 목적은 부마항쟁의 거시 역사적 의의를 고찰하려는 것이다. 어떤 역사적 사건의 의의는 거시적 역사의 흐름 속에서 갖는 위치와 역할 등에 의해 부여되는 보편적 의의와 사건 자체가 갖는 독특한 성격에 의해 부여되는 특수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 글에서 한국 현대사라는 거시 역사적 시각에서 부마항쟁이 갖는 보편적 의의에 대해

고찰해 보려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부마항쟁의 성격이나 원인, 과정 등의 논의는 생략한다. 그러한 논의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상당히 밝혀진 바도 있고 미진하더라도 이 글에서 다루기는 적절하지 않다. 특수한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부마항쟁의 독자적 가치와 의의는 다른 글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다소 추상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국현대사의 갈등구조 속에서 부마항쟁이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자면 대한민국의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인지가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 필자는 한국현대사의 흐름을 ‘4.19의 길’과 ‘5.16의 길’의 대결로 파악하는 관점을 가설로 설정한다. 이 가설은 많은 연구자들이 4.19와 5.16을 대립적 사건으로 이해하였다는 점에서 새로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4.19와 5.16이 한국 사회의 장기적 발전 전망을 달리하는 두 개의 패러다임으로서 이후의 역사에서 변용, 진화, 발전하면서 때로는 대결하고 때로는 영향을 끼치면서 이어져 왔다는 관점은 이전 연구에서는 찾기 어렵다.

이런 관점은 한국현대사의 역사적 과정에 대한 고찰에서 나온 것이며 부마항쟁이나 여타의 사회운동을 거시적으로 파악하는데 나름대로 유용한 관점을 제공한다고 본다. 이하에서 제Ⅱ장은 한국현대사에서 광의의 사회운동의 역사를 거시적으로 조망하는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4.19와 5.16을 ‘연속된 근대화혁명’으로 설명하는 논리를 비판한 후 필자가 제시하는 ‘4.19의 길’과 ‘5.16의 길’이라는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제Ⅲ장에서는 유신체제가 ‘5.16의 길’에서 가장 이상형의 정치체제이며 이 체제 하에서 대통령 박정희는 지배이데올로기였던 유신체제의 이념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체계적으로 주입하려 했으며 그 효과는 어떠한지를 살펴볼 것이다. 제Ⅳ장에서는 유신체제 하에서 ‘4.19의 길’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이 마침내 부마항쟁으로 나타나는 과정을 보여줄 것이다. 제Ⅴ장에서는 ‘4.19의 길’의 실천

으로서의 부마항쟁이 ‘5·16의 길’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던 유신체제를 뒤엎고 ‘4·19의 길’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으로 역전시켰던 사건임을 확인할 것이다.

II. ‘4·19의 길’과 ‘5·16의 길’

1. 선행 연구의 검토

여기서는 한국의 민주화운동 혹은 항쟁들을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려 한다. 한국현대사의 역사적 운동을 거시적으로 조망하는 연구로서 100년 혁명론, 역사주기론, 70년 장기혁명론이 있다.¹⁾

첫째, 100년 혁명론이란 2019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출간한 『한국민주주의, 100년의 역사』에서 제시된 관점이다. 이 관점은 3·1운동부터 최근의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100년에 걸친 민족운동과 민주화운동을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파악한다. 한국 민주주의가 8·15 이후 미군정에 의해 도입되었다는 외삼론을 비판하면서 19세기 이래 면면히 이어져 온 인민들의 집단 민주주의 문화에 주목한다. 즉, 조선조 말의 노비해방에서 시작하여 동학농민전쟁,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의회개설운동 등을 거치면서 민주주의는 반봉건·반외세 저항운동의 문화 속에서 자라났음을 강조한다.²⁾ 그런 점에서 3·1운동을 포함하여 최근

1) 이 명칭은 필자가 임의로 명명한 것이다.

2) 김정인, 「1장 한국 민주주의 기원의 재구성」, 『한국 민주주의 100년의 혁명, 1919~2019』, 한울아카데미, 2019.

의 촛불혁명까지 한국 민주주의는 100년의 혁명을 거쳐 왔다는 주장은 충분한 근거를 갖는다. 하지만 이 관점에 대해서 두 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먼저 일제 식민지 하의 (민주주의운동을 포함한) 항일독립운동과 분단국가이기는 하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의 민주화운동을 동일 선상에 놓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점이다.

다음으로는 이 책에서는 3.1운동-4월혁명-5.18항쟁-6월항쟁-촛불항쟁을 ‘100년 혁명’의 중요한 매듭으로 설정하면서 부마민주항쟁은 전혀 도외시한다. 한 가지 예만 들어 보자. 이 책에는 5.18항쟁을 평가하는 다음과 같은 서술이 있다. “5.18은 군의 무참한 학살로 끝났지만 광주시민의 고귀한 희생은 결실을 맺었다. 기만적이기는 하나 전두환 정권의 7년 단임제 약속은 4월혁명과 광주항쟁의 성과이다. 단임제는 전두환이 시민들을 달래기 위해 내건 공약으로, 그것을 민주주의로 인식했고 ‘단임 정신’이라고 부를 정도로 강조했다.”³⁾ 5공 헌법에 명시된 단임제 조항의 가장 직접적 계기라면 부마항쟁으로 촉발된 10·26사건과 유신체제의 붕괴일 터인데⁴⁾ 부마항쟁을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둘째, 조대엽의 ‘역사주기론’이 있다. 조대엽은 해방 이후 정부 수립의 시기부터 1990년대 초까지의 시기를 하나의 역사적 국면으로 보고, 이 시기를 민족분단이 고착화되고 외세의 규정력이 극대화된 ‘분단적 상황’과 민간에서 군부로 이어지는 권위주의적 정치권력의 억압적 ‘국가주의’가 결합됨으로써 반공이데올로기와 국가주의이념이 지배하는 ‘분단·국가주의’의 역사적 국면으로 보고 이 국면에서 나타나는 사회운동의 시기 특히 1960년 4월혁명에서 1987년 6월항쟁으로 이어지는 시

3) 이나미, 「3장 중단 없는 민주주의 혁명: 양상과 성과」, 『한국 민주주의 100년의 혁명, 1919~2019』, 한울아카데미, 2019, 130~131쪽.

4) 조정관, 『한국민주화에 있어서 부마항쟁의 역할』,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재조명』,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설 민주주의사회연구소, 2009, 300~303쪽.

기를 ‘민족민주운동의 역사적 주기’로 본다.⁵⁾ 하지만 1990년대 초까지의 이러한 진화는 ‘분단·국가주의’의 역사적 국면에서 전개되는 민족민주운동의 주기 내적 진화였다. 비록 한반도에서 분단 상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1980년대 말 동구사회주의 붕괴 이후 빠르게 전개된 탈냉전적 지구시장화의 경향과 국내 정치적으로 1990년대 이후의 민주화 경향은 ‘분단·국가주의’의 역사적 국면을 ‘탈냉전·시장주의’의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켰다고 이해한다.⁶⁾

하지만 필자는 이런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탈냉전이 전 세계적 범위에서는 타당할 수 있으나 한반도에는 지금도 여전히 분단·냉전이 지속되고 있고, 민주화를 통해 반공국가주의는 약화되었으나 국가권력의 민주화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조대엽이 말하는 사회권력의 민주화, 미시권력의 민주화가 중요한 과제임은 동의하나 민족민주운동의 역사적 과제의 해결은 아직 미완이기 때문이다. 이 과제는 최소한 한반도에서 평화가 제도적으로 정착하고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가 공고화되기 전에는 해결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아직도 ‘4·19의 길’은 여전히 진화하면서 촛불항쟁으로 발전했고 ‘5·16의 길’은 상당히 퇴조했음에도 여전히 한국사회의 지배층을 움직이는 강력한 노선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1990년대 이후 사회운동의 주체나 형태는 상당히 큰 변화를 겪어왔다. 하지만 이것은 현 시대에서 해결해야 할 역사적 과제가 변해서라기보다 사회구조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 그에 따른 사회문화적 변화의 진폭이 워낙 커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변화라고 생각된다.

셋째로 이완범의 ‘70년 장기혁명론’이 있다. 2019년 이완범은 4·19

5) 조대엽, 『4월혁명의 순환구조와 6·3항쟁』, 『4월혁명과 한국민주주의』, 2010, 도서출판 선인, 647쪽.

6) 조대엽, 위의 논문, 672~673쪽.

이래 촛불항쟁까지의 역사적 흐름을 세대교체를 통한 70년간의 장기혁명으로 표현했다. “1960~1980년에 운동을 주도한 자유주의적이고 낭만적인(친미적인) 민주화운동세대가 1981년 이후 (반미)혁명적 386세대로 교체되었다가 다시 21세기(개인주의적인) 촛불세대로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민주화운동 세대교체론을 논한 이 원고의 결론이다. 따라서 한국민주화운동은 1960~1980년 민주화운동세대 → 1981~1990년대 혁명운동세대(혁명적 386세대) → 21세기 촛불 [혁명?] 세대(2002~2017)로 그 세대가 교체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세대교체를 통해 민주주의가 계속 성숙되고 공고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⁷⁾ 이 원범의 논리는 4.19에서 촛불항쟁까지를 민주주의의 성숙과 공고화의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필자도 동의한다.

이상으로 한국의 민주화운동 혹은 항쟁들을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논리들을 간단히 검토하였다. 각 논리 간에 차이는 있지만 한국의 민주화운동 혹은 항쟁은 오랜 시간을 통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오고 있으며 그 흐름 속에서 각각의 사건들은 역사적 의의를 부여받게 된다. 필자는 그 흐름의 시작점을 6.25전쟁을 통해 한반도에서 분단국가가 공고해지는 시점에서 나타난 두 가지 사건 즉 4.19와 5.16으로 설정하며 이 두 사건이 이후의 역사운동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생각한다.

2. 김광동의 ‘연속된 근대화혁명론’

그런데 이 두 사건이 근대화혁명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수렴되었다는 논리도 있다. 김광동은 『4.19와 5.16』이란 책에서 4.19는 5.16과 연속

7) 이원범, 『4월혁명과 세대 - 민주화운동세대와 촛불혁명세대』, 자료집 『프랑스혁명에서 ‘촛불혁명’까지』, 2019, 262~263쪽.

된 근대화혁명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의 결론을 잠시 인용해 보자.

“자유민주체제를 만든 이승만 정부 12년을 넘어 ‘못살겠다, 갈아 보자.’는 국민적 염원을 근대 산업국가로 승화시켜낸 4.19와 5.16은 고도의 연속성을 갖는 것이다. … 5.16 이후 펼쳐진 40년이 넘게 전개된 빛나는 근대 산업화는 4.19와 5.16이 만든 생산과 건설 지향적 민족주의 지향의 결과이다. … 4.19와 5.16은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계승되고 연속된 것이다. 그것은 ‘민족적 무기력’에 대한 응비의 시도였고 결과적으로 연속된 근대화혁명이었다. … 그렇기에 4.19는 ‘좌절된 혁명’이 아니라 그 자체로 혁명이고, 더 나아가 5.16으로 꽃피워지고 ‘완성된 혁명’이다. … 4.19와 5.16의 상호관계를 가장 정확히 표현했던 선각자 함석헌 옹은 5.16 발생 직후 4.19의 학생은 잎이고 5.16의 군은 꽃이라 표현했다. 그리고 4.19의 잎과 5.16의 꽃은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 예언했었다. 물론 그 예언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확하게 대한민국에서 ‘한강의 기적’으로 실현되었고 신생 독립국과 개발도상국의 발전모델이란 열매로 맺어졌다.”⁸⁾

이 논리의 허구성을 몇 가지만 짚어보자. 첫째, 1948년 이래로 이미 민주주의혁명이 진행되었고 이승만 정부는 자유민주체제였다고 주장한다. 이승만 정권이 자유민주체제였다면 왜 4.19가 필요했던 것인지 아무런 설명도 없다. 둘째, 5.16은 4.19로 인하여 탄생될 수 있었던 것이라 했는데 이는 전형적인 사실왜곡이다. 박정희가 연관된 군부쿠데타 모의는 4.19 이전에 이미 있었다. 셋째, 함석헌이 ‘4.19는 잎이고 5.16은 꽃’이라 했다는 표현은 당시의 비판적 지식인들의 희망사항을 표현한데 불과하며 이후 함석헌은 지속적으로 박정희 정권과 대립하며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역사에 눈을 감는 처사이다. 5.16 직후에는 혁신세력

8) 김광동, 『4.19와 5.16』, 기파랑, 2004, 229~230쪽.

들도 쿠데타의 성격을 판단하지 못해 우왕좌왕했고 심지어 기대감을 표시하기도 했다.⁹⁾ 이는 당시 제3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던 민족주의적 군부쿠데타와 유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 그리고 주모자인 박정희가 한때 남로당의 경력을 갖고 있었다는 점 등이 복합되어 나타났던 착시 현상이었다. 김광동의 논리는 4·19와 5·16이 갖는 고유한 가치 혹은 이념들을 사상하고 근대화혁명이라는 자의적인 개념 속에 양자의 차이를 덮어버린다.

3. 두 개의 길

그럼 4·19와 5·16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많은 논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1945년에서 1960년에 이르는 한국(남한)사회는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었다. 강제된 분단과 전쟁, 외세 종속, 절대 빈곤, 권위주의 독재 등 한국사회가 처해 있는 절망적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를 놓고 두 개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하나가 4·19이고 다른 하나가 5·16이었다.

필자는 4·19가 제시했던 이념, 지향 등을 ‘4·19의 길’, 5·16이 제시했던 그것을 ‘5·16의 길’이라고 설정해 보았다. 이 두 개의 길은 이후 한국 사회의 발전방향과 경로를 제시한 사건이었다. 이후의 역사는 이 두 개의 발전 경로를 두고 대립, 경쟁, 각축하는 역사로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4·19의 길’이든 ‘5·16의 길’이든 처음부터 그 내용이 모두 명확하게 제시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방향과 전망은 판이하게 달랐다.¹⁰⁾

9) 김병권 구술, 김병길 면담(2003. 11. 5, 구술자 자택). 이 구술에 의하면 5·16으로 체포되어 감옥에 갇혀 있던 사회당 간부들이 박정희가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되자 옥중에서 만세를 부르기도 했다고 한다.

10) 이 두 개의 길은 달리 표현하면 ‘아래로부터의 혁명’과 ‘위로부터의 혁명’의 대립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용어는 1978년 엘런 케이 트림버거(Ellen Kay

4월혁명은 근대 민족국가의 질서 내에서 전개되는 민주주의와 민족운동의 출발을 의미한다.¹¹⁾ 4·19와 5·16은 동일한 문제를 위에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양자가 공유하는 종속자본주의의 위기(당시 원조경제의 위기로 나타난다)와 그에 대한 극복으로서의 민족민주적 과제 해결의 모색이라는 점이다.¹²⁾ 4월혁명의 이념은 초기 단계에서는 반독재 민주화였으나 이후 민족적 자주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로 발전되어 갔다.¹³⁾ 이후 소외된 민중들의 생존권 뿐 아니라 자립적 경제 건설, 경제민주화, 인권, 소수자 문제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갔다. ‘4·19의 길’은 민족이 처한 절망적 상황을 민중이 주체가 되어서 아래로부터 민주주의와 평화통일, 자주적 경제건설의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이었는데 반해, ‘5·16의 길’은 위로부터 지도자(군부 엘리트든 민간 엘리트든) 주도 하의 정치적 권위주의, 냉전적 반공주의와 군사안보,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타개하고자 했다. 그것은 쿠데타 당시에 발표했던 혁명공약에서 잘 드러난다. 6개항의 공약을 요약하면 친미반공, 부정부패 척결, 경제 재건이다. 이후 ‘5·16의 길’을 충실히 걸었던 박정희 정권은 반공과 안보를 앞세워 민중의 민주화, 생존권 요구를 억압하면서 재벌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나아갔다. 이후의 역사에서 두 가지의 길을 따르는 세력들 간에 대립과 각축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참고로 ‘4·19의 길’과 ‘5·16의 길’이 지향하는 바를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Trimberger)가 사용한 것이다(김석근, 『성공한 쿠데타, 위로부터의 혁명, 그리고 5·16』,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1-1, 2012).

11) 조대엽, 앞의 논문, 2010, 648쪽.

12) 김진균·김재훈·백승욱, 『한국사회변혁론과 4월혁명』,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1』, 한길사, 1990, 379~380쪽.

13) 고성국, 『4월혁명의 이념』,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1』, 한길사, 1990, 141~181쪽.

<표1> '4·19의 길'과 '5·16의 길'의 지향점

범주	4·19의 길	5·16의 길
주체, 주도세력	국민, 민중, 시민 등 피지배층	군부 혹은 민간 엘리트
정치적 지향	민주주의, 자유, 민중 중심	권위주의, 지도자 중심
경제적 지향	균등, 평등, 복지	효율, 성장
남북관계	화해협력, 평화, 통일	냉전, 반공, 안보
대외관계	반외세, 민족 자주	친미, 친일

그런데 한국현대사를 이 두 개의 길로 이해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 사회의 변화와 발전은 사회를 구성하는 세 세력 간의 이해관계 및 그것을 반영하는 사상이념과 정치적 실천의 총체적 갈등구조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갈등 혹은 균열은 정치를 통해 표현되고 정당정치가 행해지는 국가에서는 정당 간의 경쟁으로 표출된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이념적, 구조적 제약은 사회 발전을 추동할 정치적 갈등이 정당을 통해서 표출되기보다 비제도적 운동을 통해 표현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정당을 매개로 하는 제도정치를 포함하는 더 넓은 범위에서 갈등구조를 포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대 한국사회의 갈등구조를 표현하는데 있어 흔히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또는 좌파와 우파, 혹은 민주화(세력)와 산업화(세력)라는 대립항을 설정한다.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는 주로 사상이념적 차이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고, 산업화와 민주화는 역사적 맥락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보수/진보나 좌파/우파의 대립으로 한국현대사의 갈등구조를 표현하면 역사적 맥락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산업화와 민주화로 현대 한국의 역사적 갈등구조를 표현하는 것도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 산업화를 주도했다는 세력은 산업화만 주장하거나 실천한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면에 걸친 총체적 노선을 가지

고 있었다. 물론 그 노선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조건에 따라 성장, 변용, 진화되어 갔다. 민주화를 주도한 세력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갈등구조를 보다 포괄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설정한 ‘4·19의 길’과 ‘5·16의 길’ 개념은 1960년과 1961년에 일어난 역사적으로 특정한 사건을 넘어서서 그 사건에서 발현된 총체적 노선 = 사상이념, 가치체계, 실천 프로그램 등이 이후 긴 역사적 과정 속에서 변화를 거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동일성을 유지하는 어떤 지향이나 경로를 지칭한다. ‘4·19의 길’과 ‘5·16의 길’이란 용어는 특정한 사건과 연관되어 있어서 의미상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럼에도 굳이 이 용어를 쓰는 이유는 이 두 사건이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일종의 정초(定礎) 사건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 두 사건이 그 이후의 한국사회의 변화를 추동하는 갈등의 축이자 출발점이기 때문이다.¹⁴⁾

Ⅲ. 유신체제 - ‘5·16의 길’의 이상형

1. 유신체제의 이념

‘5·16의 길’은 그 지향점에 있어서 유신체제에서 그 정점에 달한다. 박정희는 집권 초기부터 민주주의는 하나의 이상일 뿐 후진적 현실 속

14) 백낙청, 박현채, 진덕규 등 많은 연구자들은 4월혁명이 단순한 정치운동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진정한 민족해방을 위한 민중혁명이었으나 미완에 그쳤다고 보았다. 진덕규는 “4월혁명의 이념은 여전히 한국정치사회의 지표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활성적인 동력체로 기능하고 있으며 바로 이것을 확인하는 작업에서부터 정치사회의 가치적 출발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고 언명한다(진덕규, 『4월혁명의 정치적 갈등구조』, 강만길 외, 『4월혁명론』, 한길사, 1983, 84쪽). 5·16쿠데타 역시 주도자인 박정희는 조국근대화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혁명으로 인식했고, 김일영, 하야시 타케히코(林建彦)는 5·16쿠데타가 ‘위로부터의 혁명’이라고 주장했다(김석근, 앞의 논문, 217~220쪽).

에서 그것은 위로부터의 강력한 지도-지배를 조건으로 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 후진성의 핵심은 경제적 빈곤의 문제였고 ‘근대화 과제 완수’가 곧 “민주혁명의 목표”임을 천명했다. 박정희는 민주주의에도 지도성이 도입되어야 하며 한국사상사의 주체성에 접목한 민주주의의 한국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민주주의의 한국화는 유신 이후 한국적 민주주의로 구체화되었다.¹⁵⁾

5.16 이후 박정희 정권이 추진한 근대화에서 민중은 근대화를 위해 주어진 과업에 복무하는 산업전사(즉 군인)인 것이지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심판하는 존재는 아니었다. 이 점에 대해서 김상봉은 다음과 같이 논한 바 있다.

그는 국가를 창조하려 했듯이 국민도 창조하려 했다. 그는 군인이 되기 전에 교사였다. 이미 68년에 그는 국민교육헌장을 만들어 모든 한국인에게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부여하려 했다. ... 박정희는 절대적 군인으로서 모두를 자기의 명령 아래 지배하려 하면서 동시에 절대적 교사로서 모두의 내면을 통제하려 하였다. 그가 부여한 내면적 사명과 외면적 훈육에 따라 당시 모든 국민은 한편으로는 용감한 군인이 되어야 했고 다른 편으로는 근면한 노동자가 되어야 했다.¹⁶⁾

박정희는 유신을 전후하여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명확하게 선포하고 실천하였다. 특히 교육과 관련하여 1972년 3월 24일 대구에서 열린 ‘총력안보를 위한 전국 교육자 대회’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15) 황병주, 『박정희 체제의 지배담론 - 근대화 담론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263~264쪽.

16) 김상봉, 『귀향, 혁명의 시원을 찾아서 - 부끄러움에 대하여』,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재조명』, 2009, 83쪽.

우리 민족의 정통성과 확고한 국가관에 기초를 둔 교육, 그리고 우리 민족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교육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인간, 곧 애국적인 대한민국의 국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¹⁷⁾

교육을 통해 생산해야 할 국민의 상은 개인보다 국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애국적 국민’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 애국적 국민 만들기 프로젝트의 세 축은 국민교육헌장에 기반한 제도교육과 새마을운동 및 새마을교육 그리고 전통문화정책 및 성역화사업이었다.¹⁸⁾

3. 유신체제 하의 이데올로기 교육

1) 제도교육

박정희는 자신의 사상을 따르고 실천하는 국민을 육성하기 위해 특별히 교육을 강조했다. 유신 이전에 제정된 국민교육헌장은 김상봉도 지적했듯이 그가 생각하는 새로운 국민을 창조하기 위한 헌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헌장이 국가적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강조되고 보급된 것은 유신체제 수립 이후였다. 박정희는 1972년 12월 5일 국민교육헌장 4주년 기념 선포식에서 “10월 유신의 정신이 윤리규범으로 곧 국민교육헌장의 이념과 그 기초를 같이 하는 것이며, 이 헌장 이념의 생활화는 곧 유신과업을 주체적으로 실현하는 첫 장”이라고 강조했다. 1974년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완벽한 국정교과서체제로 구축하면서 유신의 이념, 국민교육헌장의 윤리규범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과서를 개편하였다. 헌장의 암송이 학생 뿐 아니라 새마을 연수 등을 통해 직장인

17) 최광승, 『유신체제가 박정희 정권의 애국적 국민 생산 프로젝트』, 『한국학연구』 33, 2014, 238쪽.

18) 최광승, 위의 논문, 239쪽.

과 노동자들에게도 강요되었다. 1974년 6월 22일 국민교육헌장 낭독을 의례화한 이후에는 헌장이 낭독될 때 행사장의 전원이 기립하여 부동자세를 취해야 하고 낭독자는 교육헌장을 반드시 두 손으로 받들어 낭독하도록 했다.¹⁹⁾

5·16쿠데타 공약의 첫째 항목이었던 반공은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직후에도 그 방침에는 하등의 변화가 없었다. 1974년의 교육과정 개편으로 ‘국민윤리’가 사회과로부터 독립하여 필수교과로 되었다. 교과서는 『국민윤리』와 반공 교과서인 『자유수호의 길』로 나뉘어졌고 반공교육의 시수도 늘어났다. 학교에서는 반공 글짓기 대회, 반공응변대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반공규율을 강화하였다.²⁰⁾

유신 이후 새롭게 등장한 이데올로기는 ‘한국적 민주주의’였다. ‘한국적 민주주의’는 근대민주주의의 원리에 반하는 유신독재체제를 한국적 특수성, 민족적 주체성이라는 명분으로 합리화하는 것이었다. 박정희는 ‘한국적 민주주의’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전통을 신라의 화랑운동과 화백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전통은 서구의 대립과 투쟁 대신 융화와 협동을 기반으로 하는 특징을 지닌다고 강조했다.²¹⁾

또 박정희는 1977년부터 충효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1977년 2월 4일 문교부 연두순시에서 그가 충효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그 해 4월 문교부는 충효 교육을 중심으로 한 “도의 교육의 강화방안”을 마련하였고 1978년 7월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충효 교육의 이론과 실제』라는 책을 전 교직원에게 배포하였다.²²⁾

1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엮음, 『한국민주화운동사 2』, 2017, 84~85쪽.

2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엮음, 위의 책, 80~81쪽.

2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엮음, 위의 책, 81~82쪽.

2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엮음, 위의 책, 82~83쪽.

2) 새마을운동과 새마을 교육

새마을운동은 유신체제의 국민운동이었다. 박정희 정부는 1973년부터 새마을운동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전국민적 운동으로 확장시켰다. 새마을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또한 농민에게 국민 구성원의 평등성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해 준 것 중 하나가 새마을교육이었다.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은 청와대 비서실이 직접 관장한 곳으로 1972~1979년에 여기서 새마을 관련 각종 합숙교육을 받은 사람만 무려 67만 7,900명이었으며 이곳의 비합숙 교육인원은 6,953만 여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에 달했다.²³⁾

박정희는 새마을운동을 ‘생활 속의 민주주의’로 규정하면서 ‘직접민주주의’ 또는 ‘이웃민주주의’라고 불렀다. 그는 새마을운동을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강변하면서 이와 대비되는 국회의사당의 소란스럽고 비효율적인 정치를 경멸했다. 어쨌든 농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전국 거의 모든 마을에서 연인원 수백만 명이 동원되었고 자기 농사일도 내팽개친 채 운동에 헌신하는 새마을지도자와 이장이 술하게 생겨났다. 새마을운동의 경험을 일생일대의 보람찬 일로 기억하는 농민들도 한둘이 아니다. 이런 반응의 요인은 첫째 물질적 유인이고 둘째는 농민들의 자존감이었다. 새마을운동을 통해 농민들은 국가 최고지도자와 동일시가 가능해졌다. 새마을연수원에서 진행된 새마을교육에서는 장관을 비롯한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이름 모를 시골 마을의 새마을지도자와 서로 동지라고 부르며 숙식을 함께 했다. 월간 『경제동향보고』 회의석상에서도 새마을지도자가 한 명씩 매번 참석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 이름 대신 ‘○○댁’으로 불리던 부녀지도자들은 군수와 면장 같은 높은 분들이 자신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칭찬하는 것을 듣고

23) 황병주, 『박정희 체제의 지배담론과 대중의 국민화』, 『대중독재』, 책세상, 2004, 500~502쪽.

말할 수 없는 희열과 보람을 느꼈다고도 했다.²⁴⁾

새마을교육의 주요 내용은 유신체제의 정당성과 총력안보체제의 필요성 및 새마을운동의 뿌리로서의 전통적 가치와 민족정신이었다. 특히 후자의 내용으로 정, 존경의 원리, 절제, 단결, 지도자의 영도력 등 ‘집단주의적’ 공동체 원리를 강조하였고, 이를 ‘건전한 국민동 의와 사회윤리’ 및 ‘민족주체성’의 뿌리로 지목하였다. 이는 새마을교육이 강조하는 핵심가치들이 국가주의적, 집단주의적 가치라는 점을 보여준다. 박 정권은 새마을교육을 통해 국민들이 유신체제가 요구하는 ‘이상적 인간형’ 곧 국가주의와 집단주의에 충실한 인간형으로 개조되기를 원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을 ‘유신이념의 실천 도량’이자 ‘한국적 민주주의의 구현’이라고 주장하였다.²⁵⁾

박 정권은 또 1973년부터 공장새마을운동을 시작했고 1978년부터 한국노총을 통해 유신체제에 맞는 노동윤리를 노동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교육했다. 한국노총은 노조 간부들에게 새마을정신과 노동조합운동, 유신이념, 노조 지도자들의 이상형, (도시산업선교회와 가톨릭노동청년회를 지칭하는) 교회의 교리와 노조운동, 북한의 실정, 남한의 국가안보와 통일, 경제전망, 한국적 노사관계 등을 교육했다.²⁶⁾

3) 전통문화정책과 화랑교육

박정희는 1960년대 후반부터 ‘정신이 선도하는 물질문명’을 강조하면서 서구에서 받아들인 물질문명과 근대정신을 한국적 전통 속에 간직된 정신문화와 조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선전했다. 민족이라는 원초적 정서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민족문화의 정수, 즉 문화재에 주목했다. 정

24) 황병주, 『돈의 맛, 욕망하는 농민을 생산하다』, 『1970 박정희 모더니즘』, 2015, 190~194쪽.

2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엮음, 위의 책, 198~199쪽.

2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엮음, 위의 책, 199쪽.

부는 1971년부터 시작된 ‘경주고도개발사업’에 125억 원을 투자했고 보문단지를 국제적 관광단지로 조성했다. 박정희 정권은 1976년 6월에는 신라의 삼국통일에 기여한 인물인 무열왕, 문무왕, 김유신과 화랑들의 대사당인 ‘통일전’을 세워 성역화했다.²⁷⁾

박정희 정권은 신라의 역사와 화랑도를 이용해 역사인식이 투철한 새로운 국민을 만들고자 하였다. 박정희는 신라의 삼국통일을 국가와 민족이 중흥을 이룩했던 시기로 높게 평가하였고 화랑도는 우리가 이어 받아야 할 민족정신이며, 총화단결을 위해 국가의 전 영역에서 따라야 할 이념이자 실천운동으로 강조하였다.²⁸⁾

화랑교육원의 주요 교육대상은 중·고등학교의 모범적인 학생이었다. 정신력이 강건하여 수련에 지장이 없는 학생으로 학도호국단 간부학생을 우선 선정하였다. 그리고 대학생, 사관생도들로 화랑교육원의 교육대상이 확대되었고 ‘지도자 연수반’이란 이름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던 초·중·고교장, 교감 및 교사들까지 화랑교육원의 교육대상이 되었다. 1973년부터 1979년까지 교육대상 및 인원은 중·고생 70,139명, 대학생 2,397명, 교원 9,281명, 공무원 2,773명, 위탁 교육 18,867명 합계 103,457명이다. 그 교육내용을 보면 화랑정신에 대한 교육, 예절생활, 문화재 및 사적답사, 행군 등에 새마을운동, 반공, 유신지도이념 등 박정희 정권의 지배이데올로기가 포함되었다. 1978년에 제작된 『수련교본』의 뒷면에는 박정희 어록이 수록되었고, 새마을운동과 교육에 대한 박정희의 연설 내용이 담겨 있다.

오늘날의 학도들도 유신 이념을 스스로의 이념으로 삼고 나의 유
신이 곧 국가의 유신이며 국가의 안보가 나의 안전이며 국가의 발전

27) 김원, 『발굴의 시대, 왜 하필 경주였나?』, 『1970 박정희 모더니즘』, 천년의 상상, 2015, 177~182쪽.

28) 최광승, 앞의 논문, 2014, 240쪽.

이 곧 나의 발전이라는 정신 자세 아래 학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능력을 유신 이념의 실천에 옮기는데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경상북도교육위원회, 『수련교본』, 164쪽).

학생들이 입교 당시 작성한 수련소감문에는 20~30% 정도의 학생만이 투철한 애국정신과 호국학도로서의 사명감, 그리고 ‘새 화랑’으로의 자세를 가지고 화랑교육원에 입교했다. 하지만 5박 6일간의 화랑교육원의 교육을 받고 수료할 때에는 80~90%의 학생이 자신이 속한 조직의 일원으로 집단에 충실할 수 있는 호국학도이자 새 화랑으로 변모해 있었다.²⁹⁾

4) 이데올로기 교육의 효과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박정희 집권기 특히 유신체제 하에서는 다양한 국민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이데올로기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교육은 박정희 이전이나 그 이후나 어떤 정권이나 정치인도 하지 못한 것이었다. 이런 이데올로기 교육의 목적은 유신의 이념을 국민들의 의식 속에 주입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 박정희는 자연스럽게 한민족 반만년의 역사에서 ‘박혁거세 이래 최대의 위대한 민족 지도자’로 추앙된다. 이런 방식으로 유신체제는 박정희의 유사 민족주의를 효과적으로 주입하여 유신의 기수들을 배양해 내었다. 그리고 이런 교육들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효과를 남겼다. 만약 유신이 상당 기간 더 지속되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일제 말기의 황민화교육이 당시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연상해 보면 이해가 된다. 『친일문학론』으로 유명한 임종국 선생은 8.15 해방 당시 자신은 일본의 식민지배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고 한국어를 제외

29) 최광승, 앞의 논문, 2014, 267쪽.

한 모든 관념은 해방 후에 생겼다고 회고했다.³⁰⁾

1982년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 관련자의 한 사람은 고교 시절에 받았던 화랑교육의 경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한 바 있다.

그 화랑교육원 거기에 있으면서 정신교육을 받을 때 인제 명상의 시간이라고 눈을, 강당에서 인제 다 눈을 감고 박 대통령 어록을 듣는 시간이죠. ... 그 당시는 정말로 감명 깊게 들었고 막 마음 속에서 사명감이 저절로 솟구치고 나중에 나라에 큰일을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이 나는 것은 거의 일본 육군사관학교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런 방식도 사람들에게 먹히는구나, 하는 생각이 그 뒤에 들었고 ... 그래서 인간이란 참 어떻게 보면은 이지적인 존재면서 그렇게 길들여지는 나약한 존재가 아닌가.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서 그런 어록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마음 속에서 막 불 같은 게 올라오고 했으니까, 뭐 그런, 뒤에 생각도 해 봤습니다.³¹⁾

유신체제 하의 한국인들은 누구나 이런 박정희 숭배의 분위기 속에서 살았다. 그랬기 때문에 박정희가 10.26사건으로 사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 박정희 사망 후 애도의 분위기는 박정희 신화 만들기 = 박정희 숭배의 효과를 보여준다. 다음은 당시의 상황을 묘사한 기록이다.

결코 죽지 않고 이 나라의 영원한 통치자로 군림할 것 같았던 박정희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을 때 세상은 온통 혼란에 휩싸였었다. 국민들의 경악은 이내 통곡으로 변했고, 당시 고2였던 필자의 친구들 몇몇도 히스테리결한 반응을 보이며 흐느꼈다. 나는 그날 하교 길의 버

30) 임종국, 『친일문학론』, 민족문제연구소, 2002. 10~11쪽.

31) 류승렬 구술, 차성환 면담(2013. 7. 23, 구술자 자택).

스 안에서 라디오를 통해 줄곧 흘러나오는 알비노니의 ‘아다지오’를 힘겹게 들어야만 했다. 사람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처연했다.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세상을 떠돌고 있었다. 그건 단순히 거리를 가득 메운 군인들의 삼엄한 경비 때문만은 아니었다. 집단취면에 걸린 것처럼 히틀러를 향해 환호하던 독일 국민들처럼 혹은 김일성의 죽음을 천봉으로 받아들였던 북한의 주민들처럼 이 땅의 사람들 역시 박정희의 죽음 앞에서 극심한 쇼크 상태에 빠져들고 있었던 것이다. 국장이 끝난 직후 구자춘 내무부 장관은 전국 분향소의 분향객이 1,769만명이었다고 최규하 대통령에게 보고했다(<합동연감>, 1980, p. 141). 젓먹이 어린아이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분향을 한 셈이었다. 물론 그 중에는 강제로 동원된 학생이나 공무원 그리고 군인들도 적지 않았겠지만, 자발적인 분향객들의 수가 그보다 훨씬 많았을 것임에 틀림없다.³²⁾

10·26사건 직후 언론에서는 박정희가 “전후 한국사회가 겪었던 극심한 가난, 저발전, 빈곤국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준 위대한 영도자”로 묘사된다. “경제건설, 자주국방, 남북대화의 주도, 새마을운동의 제창 등 그의 치적은 조국근대화의 좌표를 설정하고 웅비의 80년대로 향하는 기틀을 조성한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정수남에 의하면 이러한 평가는 박정희를 둘러싼 논쟁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에게는 큰 차이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박정희와 함께 동시대를 살았던 당시 청장년층 세대에게 박정희는 가난 극복을 위한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자신과 함께 배고픔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던 ‘책임 있는 지도자’이자 생존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다. 박정희 애도담론에서 그는 서민적인데 그치지 않고 강직한 인격적 풍모를 지닌 인물 유형으로 등장한다. 대중에게 박정희의 카리스마적이고 신화적인

32) 신용구, 『박정희 정신분석, 신화는 없다』, 뜨인돌, 2000, 40쪽.

이미지는 그의 경제적 업적과는 다른 맥락, 즉 휴머니즘적인 모습을 통해 더욱 굳어진다. 그를 묘사한 이미지는 ‘소박한 시민성, 비타협적 정의감, 청렴, 강직성, 군인적인 책임의식, 근엄성 그리고 하면 된다는 불사조 같은 용기와 추진력’으로 집약되고 있다.³³⁾ 한국 언론은 박정희 사후의 애도 기간에만 이런 보도를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생전에도 오랫동안 그렇게 보도해 왔다. 그러므로 박정희 애도 담론이란 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언론과 권력에 의해 형성되어온 박정희 숭배 담론을 되풀이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요컨대 박정희 신화는 사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집권기간 특히 유신체제 아래서 집중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고 그것은 언론통제와 이미지정치 그리고 경제성장의 효과가 결합한 것이었다.

IV. 유신체제 하의 ‘4·19의 길’

1. 4·19세대의 집단적 배신과 분화

그러면 유신체제 하에서 ‘4·19의 길’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 살펴보자. 유신체제 하에서 4·19의 역사와 가치는 망각이 강요되고 박제화 되는데 먼저 눈에 띄는 현상은 이른바 4·19세대의 변절이 광범위하게 일어난다. 4·19의 주동학생들은 국민의 영웅으로 사랑받았지만 이들은 하나 둘 씩 변절해 갔다. 일부는 박정권 초창기에 더러는 유신체제의 앞잡이로 둔갑했다. 또 일부는 5공과 6공의 요직을 차지하기도 했다. 1972년 10월 유신쿠데타가 일어나면서 1972년 11월 16일 이른바 4·19

33) 정수남, 『대중의 집합적 슬픔 속에 내재된 애도담론과 감정정치』, 『한국학』 155, 2019, 438~444쪽.

세대의 이름으로 45명이 10월 유신을 지지하는 집단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로써 4·19의 정신은 그 당사자들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게 된다.³⁴⁾ 이른바 4·19세대의 변신에 대해 하일민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나 4월혁명 세대들은 60년대, 70년대를 살아오면서 일부는 변혁운동에 몸담아 활동하다가 슬하계 희생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배권력에 편입되어 지배이데올로기의 산출자로서의 길을 걷게 된다. 4월혁명을 철저히 부정하면서 등장한 5·16군부독재권력은 4월혁명 세대들의 변혁지향성을 보다 강화된 반공이데올로기로 탄압했다.³⁵⁾

2. 4·19전통의 억압과 계승

유신체제 하에서 권력은 4·19라는 저항의 역사에 대한 망각을 강요했다. 당시 부산의 대학사회에서 일어났던 사례들을 살펴보자. 다음은 부산대학교에서 있었던 사례이다.

정외영은 1978년 3월에 부대 신문사로 논문을 하나 써 보냈다. 『4·19의 역사적 성격과 그 전개』라는 원고지 30장 길이의 글이었다. 이 논문에서 그는 “혁명이란 것은 계속되는 것이다. 정신이 끊어지는 것은 혁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4·19의 목적이 다 이뤄지지 못했다면 그것을 완수해야 할 의무는 지금의 젊은이들에게 있다고 썼다. 이 글이 실릴 리가 없었다. 신문사에선 교정까지 본 원고를 되 돌려주었다. 정외영의 가슴은 더욱 답답해졌다.³⁶⁾

34) 김삼웅, 『변절자』, 청사, 1989, 167~168쪽.

35) 하일민, 『4월혁명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하나의 시론』, 『사월혁명회보』 133, 2020, 32쪽.

36) 조갑제, 『유고! 1』, 한길사, 1987, 224쪽.

대학교의 신문에 4·19에 대한 글은 게재될 수가 없었다. 더구나 4·19의 정신을 계승하자는 취지라면 그것은 금기에 속했을 것이다. 다음은 동아대학교의 사례이다.

1979년 4월 19일, 동아대학교 일어과 2학년 김해수는 과 학생들과 함께 마음 내키지 않는 산업시찰 여행길에 올랐다. 그는 하루 전에 학교 당국이 3박 4일간의 학생 부담 산업시찰여행을 각 과에 지시했다는 소식을 듣고 4·19를 잊게 하자는 술책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지도교수에게 “나는 4·19의 뜻을 알기 때문에 집에서 자숙하고 있겠습니다.”고 말했다. 교수는 같이 가자고 명령하듯 즐겼다. … 해수네들 태운 관광버스가 대구로 가고 있을 때 라디오에서 “오늘이 4·19 열아홉 돌이다.”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그제서야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날이 4·19임을 알아차리는 것 같았다. 김해수는 이런 꼴을 보고 가슴이 답답했다.³⁷⁾

이처럼 4·19의 역사는 망각하도록 강요되었고 4·19세대는 변절했지만 많은 청년학생들의 의식 속에서는 살아있었다. 4·19의 정신은 후속 세대에 계승되어 유신독재에 저항하는 투쟁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그 사례를 살펴보자. 부산대학교에서는 1978년 4·19기념일을 앞두고 『부산대학교 자율화민주실천선언문』을 배포하다가 여러 명의 학생들이 긴급조치 위반으로 체포, 구속되었다.

부산에서 78년 민주화운동이 시발은 4월 17일에 부산대학교에 『부산대학교 자율화민주실천선언문』이라는 반정부 유인물이 살포되

37) 조갑제, 앞의 책, 1987, 236쪽. 이 사례에 등장하는 김해수는 학교에서 문제 학생으로 낙인이 찍혀 있었다. 학교에서 예정에 없던 산업시찰을 간다고 했을 때 그는 돈도 없고 집에서 쉬겠다고 했는데 지도교수는 “너 때문에 가는 것이다. 그런데 네가 안 가면 안 된다.”라고 동행을 강요했다고 한다. 이 무렵에 이런 사례가 드물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정부 차원의 지침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면서 시작되었다. 그 내용은 반민주적 탄압 중지, 긴급조치 해제, 노동자, 농민 권익 방해 및 인권 침해 중지, 언론 탄압 중지 등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이성동(부산대생)과 전중근이 곧 체포되어 구속되었고 서연자(부산대생)는 불구속 기소, 정외영은 도피했으나 얼마 후 체포, 구속되었다.³⁸⁾

다음으로 1979년 부산대의 사례를 살펴보자.

1979년 4월 19일, 정광민은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친구와 함께 학교 뒤편 금정산성에 올라갔다. 독한 동동주를 실컷 들이켠 정광민은 오후 늦게 학교로 내려왔다. ... 정광민은 검은 매직펜으로 내갈졌다. ‘4.19-19주년’ 이것을 들고 그는 학교 도서관 안을 한 바퀴 돌았다. 학생 수 백 명이 공부하고 있다가 이 엉뚱한 1인 데모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광민이 바깥으로 나오자 100명도 넘을 듯한 학생들이 따라 나와 “무슨 일이나”고 응성됐다. ... 그 다음날 정광민은 학생상담관실에 불려가 경위서를 썼다.³⁹⁾

다음으로 부마항쟁 당시 경남대학교의 사례를 살펴보자.

경남대생 정인권은 1979년 10월 18일 경남대 교정에서 3·15의거의 정신을 절규했다. “지금 부산에서는 우리의 학우들이 유신독재에 항거하여 피를 흘리고 있다. 3·15영령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자.”라고 외쳤다.⁴⁰⁾

경찰의 저지로 더 나아갈 수 없자 학생들은 왔던 길을 되돌아 3·15

38)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부산민주운동사』, 1998, 313쪽.

39) 조갑제, 앞의 책, 1987, 252쪽. 정광민은 그 해 10월 16일 부마항쟁의 시발점이 된 부산대 시위를 주도한다.

40) 박영주, 「10·18마산민중항쟁의 전개과정」, 『부마민주항쟁10주년기념자료집』, 1989, 279쪽.

기념탑 앞까지 왔다. 한편 시내 중심가인 창동 근처에 모여 있던 학생들도 대열을 형성하고 ‘선구자’ ‘봉선화’ ‘홀라송’ 등을 부르며 어시장 도로로 내려와 분수로타리를 돌아 3·15기념탑에서 먼저 도착한 그룹과 합류하여 연좌농성에 들어갔다. 많은 시민들이 연도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먼저 3·15의거로 희생된 영령들에 대해 묵념한 뒤 애국가를 부르고 뒤이어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계속했다.⁴¹⁾

이런 사례들은 부마항쟁을 이끈 중요한 동력의 하나가 청년학생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 쉬던 (3·15를 포함한) 4·19의 정신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4·19의 길’은 당사자들에 의해 배신되었지만 청년세대를 통해 계승되었다.

3. 부마항쟁 - ‘4·19의 길’의 실천

부마항쟁이 ‘4·19의 길’ 위에 있었음은 학생 뿐 아니라 민중들의 참여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김상봉은 부마항쟁의 발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부마항쟁은 크게 보자면 이처럼 전태일에 의해 촉발된 70년대 학생과 노동자 그리고 종교계의 연대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부마항쟁은 70년대 초에 이처럼 새로이 조성된 민중적 연대로부터 분출된 화산이었던 것이다.⁴²⁾

그런데 민중적 연대는 4·19에서 이미 나타났던 것이다. 하지만 광범한 민중의 참여로 성공할 수 있었던 4·19는 이후 ‘학생혁명’으로 불리며 민중의 역할을 무시하는 담론이 지배하게 되었다.⁴³⁾ 민중이 본격적으

41) 박영주, 앞의 논문, 1989, 281쪽.

42) 김상봉, 앞의 논문, 2009, 90쪽.

로 대학생, 지식인의 화두로 떠오른 것은 1970년 전태일의 분신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대학생, 지식인들의 생각과 달리 민중들은 정치적 행동을 극도로 꺼렸다. 유신체제 하에서도 노동자,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은 이어졌지만 그 구호는 노동조건 개선의 넘어서지 않았다. 정치투쟁이 초래할 엄청난 탄압의 두려움 때문에 민중들은 지식인이나 대학생들의 유신반대 투쟁에 동참하지 않았다. 1979년 8월의 YH사건도 노동문제가 정치쟁점화되었지만 노동자들의 요구는 결코 정치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부마항쟁에서는 달랐다. 부마항쟁에서 노동자들은 학생들과 함께 “유신철폐, 독재타도”를 외쳤다. 이것은 4·19의 참모습이었던 광범한 민중들의 참여가 18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재현된 것이다. 이승만 독재를 붕괴시킨 3·15를 포함한 4·19의 역사적 경험은 부산과 마산의 학생, 시민들을 행동으로 이끈 커다란 힘의 원천이었다.⁴⁴⁾ 부마항쟁을 통해 ‘4·19의 길’은 다시금 한국사회의 새로운 이정표로 제시되었다.

II. 맺음말

앞서 필자는 부마항쟁이 ‘5·16의 길’이 ‘4·19의 길’을 압도하는 상황처럼 보였던 유신체제 하에서 극적으로 ‘4·19의 길’을 희생시킨 사건이

-
- 43) 따라서 4월 19일 대학생 시위와 희생의 공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나, 4월 혁명을 이처럼 대학생-지식인 위주로 풀어가는 서사는 거짓은 아니나 참도 아니다. 4월 혁명의 성공에는 이들 외에도 수많은 다양한 계층과 연령층, 남녀 모두 함께 기여했기 때문이다(장숙경, 『4월 혁명, 주권재민의 첫 승리』, 『한국 민주주의, 100년의 혁명 1919~2019』. 2019, 한울아카데미, 197~198쪽).
- 44) 1979년 10월 15일에 나온 신재식의 ‘민주투쟁선언문’에는 “반봉건 동학농민혁명과 반식민 3·1독립운동 및 무장독립투쟁에 이어 저 찬란하던 반독재 4월의 학생혁명을 타고 흐르는 한민족의 위대하고도 피로 응어리진 자유평등의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 하자는 취지의 문장이 등장한다.

부마항쟁이라고 했다. 여기서 극적(dramatic)이라고 표현한 것은 결코 수사적인 것이 아니다. 당시 부마항쟁을 목격했던 최성묵 목사의 증언은 그런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끝없는 탄압과 투쟁을 해 오다가 좌절하고 좌절하면서 그 거대한 움직임에 당해 보니 실로 상상을 초월했고, 어떤 확신 같은 것이 솟아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체계가 잡힌 것 같이 시위대를 보호해 주고 어둠이 깔리면 기층 민중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고 하는 정도면 유신도 박정희도 이젠 갔다고 생각했죠.⁴⁵⁾

부마항쟁은 박정희의 피살과 함께 유신의 종말을 가져왔다. 하지만 10·26사건은 박정희와 차지철만을 제거했을 뿐 국가권력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김재규가 10·26사건 직후 전두환의 보안사에 의해 체포되는 것은 그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므로 국무총리 최규하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취임한 과도정부가 어떤 길로 갈 것인지는 불확실했다. 그럼에도 이 시기부터 유신을 지지, 찬양하는 언설은 일체 자취를 감추었다. “유신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던 그 많던 언론인, 지식인들이 박정희 사망 후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면을 장식한 주제는 ‘민주화’였다. 최규하 과도정부도 민주화 자체를 부정하거나 유신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권위주의 통치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은 일체 보이지 않는다.⁴⁶⁾ 이것은 10·26 직전 발생했던 부마항쟁이 원인이 되어

45) 최성묵, 증언 15, 『부마민주항쟁10주년기념자료집』, 1989, 154쪽.

46) 최규하 과도정부는 1979년 12월 6일 유신헌법의 절차에 따른 대통령선거를 실시하면서도 “합헌적인 절차에 따라 평화적인 정부 이양”과 민주주의를 말한다(『동아일보』 1979.12.6.). 또한 10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본인은 지난 11월 10일 시국에 관한 특별담화에서 헌법 개정을 포함한 정치적 발전문제에 관하여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현행 헌법에 규정된 잔여임기를 채우지 않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빠른 기간 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어서 헌법을 개정하고 그 헌법에 따라 선거를 실시

유신의 엘리트 일반도 민중의 강력한 민주화로의 열망을 잘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⁴⁷⁾ 다시 말해 부마항쟁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극적으로 대변함으로써 박정희 사후 민주화 외의 다른 길이 없다는 인식을 내외에 확산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여론의 흐름은 부마항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 유신체제 이후의 진로에 대해 별 이견 없이 민주화의 길, 다시 말해 ‘4.19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 범국민적 합의가 가능했던 것이다.⁴⁸⁾ 따라서 부마항쟁은 ‘4.19의 길’을 기사화생시켰고 신군부가 이를 뒤집었지만 5.18항쟁과 6월항쟁을 통해 다시 뒤집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었다는 거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 참고문헌 |

1. 저서 및 논문

강만길 외, 『4월혁명론』, 한길사, 1983

고성국, 『4월혁명의 이념』,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1』, 한길사, 1990.

김광동, 『4.19와 5.16』, 기파랑, 2004.

김삼웅, 『변절자』, 청사, 1989.

김상봉, 「귀향, 혁명의 시원을 찾아서 - 부끄러움에 대하여」,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재조명』, 2009.

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라고 밝혔다(『매일경제』 1979.12.21.). 외신들도 한국의 민주화를 긍정적으로 보도하면서 기대를 표명했다. 크리스천사이언스 모니터는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을 보장하는 정치발전이 불가결한 요소다. 한국민은 최근 일련의 협조적인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를 이룩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게 될 것 같다.”라고 논평했다(『동아일보』 1979.11.20.).

47) 조정관, 앞의 논문, 2009, 297쪽.

48) 신군부세력이 12.12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이러한 합의를 거부하고 권력을 찬탈했으나 그 과정에서 5.18항쟁을 비롯한 엄청난 저항을 받았던 것은 그러한 합의에 따른 기대가 고양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 김석근, 「성공한 쿠데타, 위로부터의 혁명, 그리고 5·16」,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제11권 제1호, 2012.
- 김 원, 「발굴의 시대, 왜 하필 경주였나?」, 『1970 박정희 모더니즘』, 천년의 상상, 2015.
- 김정인, 「1장 한국 민주주의 기원의 재구성」, 『한국 민주주의 100년의 혁명, 1919~2019』, 한울아카데미, 2019.
- 김진근·김재훈·백승욱, 「한국사회변혁론과 4월혁명」,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 1』, 한길사, 1990.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엮음, 『한국민주화운동사. 2』, 들베개, 2017.
- 민청학련계승사업회, 『민청학련』, (주)메디치미디어, 2018.
- 박영주, 「10·18마산민중항쟁의 전개과정」, 『부마민주항쟁10주년기념자료집』, 1989.
- 박현채, 「4월민주혁명과 민족사의 방향」, 『4월혁명론』, 한길사, 1983.
- 백낙청, 「4.19의 역사적 의의와 현재성」, 『4월혁명론』, 한길사, 1983.
-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부산민주운동사』, 부산광역시, 1998.
- 신용구, 『박정희 정신분석, 신화는 없다』, 뜨인돌, 2000.
- 이나미, 「3장 중단 없는 민주주의 혁명 : 양상과 성과」, 『한국 민주주의 100년의 혁명, 1919~2019』, 한울아카데미, 2019.
- 이완범, 「4월혁명과 세대 - 민주화운동세대와 촛불혁명세대」, 자료집 『프랑스혁명에서 ‘촛불혁명’까지』, 2019.
- 임종국, 『친일문학론』, 민족문제연구소, 2002.
- 정수남, 「대중의 집합적 슬픔 속에 내재된 애도담론과 감정정치」, 『한국학』 155집, 2019.
- 조갑제, 『유고! 1』, 한길사, 1987.
- 조대엽, 「4월혁명의 순환구조와 63항쟁」, 『4월혁명과 한국민주주의』, 도서출판 선인, 2010.
- 조정관, 「한국민주화에 있어서 부마항쟁의 역할」,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재조명』,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설 민주주의사회연구소, 2009.
- 진덕규, 「4월혁명의 정치적 갈등구조」, 『4월혁명론』, 한길사, 1983.
- 최광승, 「유신체제기 박정희 정권의 애국적 국민 생산 프로젝트」, 『한국학연구』 33, 2014.
- 최정운, 『한국인의 발견』, 미지북스, 2016.
- 표학렬, 『에피소드로 보는 유신의 추억』, 엘피, 2019.

- 한완상, 이우재, 심재택 외, 『4월혁명론 I』, 일월서각, 1983.
- 황병주, 『박정희 체제의 지배담론과 대중의 국민화』, 『대중독재』, 책세상, 2004.
- _____, 『박정희 체제의 지배담론 - 근대화 담론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 _____, 『돈의 맛, 욕망하는 농민을 생산하다』, 『1970 박정희 모더니즘』, 2015.
- 하일민, 『4월혁명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하나의 시론』, 『사월혁명회보』 133호, 2020.

2. 기타 자료

- 동아일보, 1979년 11월 20일자.
- 동아일보, 1979년 12월 6일자.
- 매일경제, 1979년 12월 21일자.
- 김병권 구술자료, 김병길 면담, 200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류승렬 구술자료, 차성환 면담, 2013.(5·18기념재단)
- 최성목, 증언 15, 『부마민주항쟁10주년기념자료집』, 1989.

투고일 : 2020. 05. 25. 심사완료일 : 2020. 06. 24. 게재확정일 : 2020. 07. 08.

| Abstract |

Historical significance of BUMA democratic uprising

Cha, Seong- Hwan

This paper attempts to consider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BUMA democratic uprising in Macroscopic viewpoint namely viewpoint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So I formulate hypothesis that Korean contemporary history is understood by confrontation between ‘The road of April 19 Revolution’ and ‘The road of May 16 Coup’. ‘The road of April 19 Revolution’ is the political line to pursue democracy, national autonomy, equality, human rights, peace and reunification of South-North Korea around people. ‘The road of May 16 Coup’ is political line to pursue authoritarianism, pro-Americanism, Anti-communism, Anti-North Korea, adherence to efficiency and economic growth around strong leader. Two roads have evolved and developed through mutual confrontation, competition from 1960s to the present. BUMA democratic uprising is a dramatical historic event that revived ‘The road of April 19 Revolution’ by reversing the situation under the overwhelming ‘The road of May 16 Coup’, Yushin regime. Under Yushin regime, President Park concentrated political power to achieve the goal of ‘The road of May 16 Coup’. All educational institutions taught Yushin ideology(democracy of korean type) to the whole nation. This ideological education showed considerable effect. Worship and praise for President Park were taught under Yushin regime. Yushin regime diminished the value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of ‘The road of April 19 Revolution’ and oppressed the memory of April 19 Revolution. But all democratic movements and popular movements of

1960s and 1970s were joined BUMA democratic uprising that explored like an eruption of a volcano and caused 'October 26 incident'. Yushin regime was collapsed by death of President Park. 'The road of April 19 Revolution' made an entrance as mainstream of South-Korean history. Under the interim government of President Choi kyu-hah, all medias and political parties asserted democratization. Democratization was general trend of the period that anyone could not denied. Though New Army Group staged a new coup, BUMA democratic uprising formed the basis that could turned military rule over through 5·18 People's Uprising and June Democracy Movement.

Keywords : BUMA democratic uprising, Yushin regime, 'The road of April 19 Revolution', 'The road of May 16 Coup', ideological education

